

다산포럼

남영신



국가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터에 환을 덕으로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니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관광객이 단순히 물건만 사 가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들이 한국 문화의 넓이와 깊이에 빠져 더 많이, 더 자주 한국을 찾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 줄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 지금처럼 안타까운 때도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잠시 우리의 새로운 문화 전통을 세우는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사람들이 한 곳에서 오래 함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무리를 특징지을 수 있는 특별한 징표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언어이고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이다. 언어가 같으면 의사소통을 가장 간편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서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함께 좋아하는 것을 발전시키고 함께 싫어하는 것을 멀리 하게 된다. 이로써 그 무리를 다른 무리와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징표 곧 그 무리의

문화가 발생한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 즐겼고,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에도 이를 우리 방식으로 변형하여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우리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만들어 낸 우리의 문화를 넓고 깊게 즐기

거들나야 한다. 할아버지의 삶과 생각이 지식과 손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유익한 사람들의 지식이 무식한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소통이 원활해져야 한다. 소통의 중요한 매체가 언어이므로 우리는 세대 간, 계층 간에 언어 소통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한국어를 반듯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공유해야 한다. 한국어의 깊은맛을 이해하고 맛있게 멋있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다면 의미 있는 한국 문화를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문화 전통을 세우려면 먼저 우

면, 문화 전통은 곧 공동체 문화를 정형화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 전통이 만들어져야 한다. 두레는 일을 통해서 생활 공동체를 묶은 좋은 조직이었고, 농악은 즐거움을 통해서 생활공동체를 묶은 좋은 놀이였다. 이것들은 모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생적 문화였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자생적 문화를 일괄 토양이 너무 척박해진 상태이다. 관이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고 시민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토양에서는 우리의 독특한 문화 전통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문화 전통을 세우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말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 공동체를 이룩하는 일과 구성원들이 동참하는 생활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라면 우리말을 혼잡스럽게 만들으로써 세대 간, 계층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와 외국의 문물을 무분별하게 수입함으로써 한국인의 생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된다. 우리가 어떤 언어 전통을 이룩하는 첫째 조건이다.

문화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둘째로 시작해야 할 것은 생활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다. 문화 전통은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 문화를 즐기고 다음으면서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

새로운 문화 전통을 위하여

지 못한 점이 있다. 첫째 이유는 과거에는 중국문화를 근대 이후에는 일본문화와 미국문화(또는 서양문화)를 지나치게 교조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를 버무리는 능력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고,

둘째 이유는 수많은 외침과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폐쇄된 경제 때문에 스스로 즐기고 좋아하는 문화를 가꿀 여유를 갖지 못한 것이다.

의미 있는 문화 전통을 세우려면 첫째로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소통 공동체로

리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한국인 모두가 한국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국어의 소통 능력과 한국인의 언어 사용 능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어로 수준 높게 소통할 수 있는 소통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한국인의 문화 전통을 이룩하는 첫째 조건이다.

문화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둘째로 시작해야 할 것은 생활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다. 문화 전통은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 문화를 즐기고 다음으면서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

〈(사)국어문화운동본부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농식품부, J프로젝트 '알박기' 철회하라

그동안 농림수산물식품부의 J프로젝트 '알박기'로 속앓이 해온 전남도가 공세에 나섰다. 최근 전남도는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에 정부지 중 해남군 산이면 송천지구에 농식품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유리온실단지 건립 계획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달 초 농식품부는 J프로젝트 예정부지인 송천지구의 일부 간척지에 유리온실단지를 조성하기로 해 전남도와 갈등을 빚어 왔다.

이처럼 전남도가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은 유리온실단지가 들어서면 경우 J프로젝트의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송천지구는 전남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카지노 호텔 건립 등을 추진키로 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한 곳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미국 트러스(TRUSS)그룹의 차이나텔사, 대만 건설사인 '후주' 사와 투자계약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갑자기 대규모 유리온실 건립계획을 추켜 들면서 J프로젝트의 외

자유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번이 아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도 간척지에 대한 양도·양수 협의의 해 주지않아 J프로젝트 개발계획이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농식품부의 일련의 행태는 J프로젝트의 발목 잡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외자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리온실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가뜰이나 한문의 달라가 아쉬운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들어오겠다는 것을 마다하고 온실을 짓겠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J프로젝트는 낙후된 서남해안 지역의 성장을 이끌 동력이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 도와줘도 시너지 없을 판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다니 어느 나라 농식품부인가. J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유리온실사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농식품부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용산참사' 검찰수사 결과 납득 안된다

검찰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농성자와 운영업체 직원 27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특공대 투입 역시 적법했다고 결론 지었다. 경찰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 수사결과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민간인 5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시위대에게만 지운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화염병 투척자나 시너 투기자 등을 특정하지 못해 일부는 영구 미제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아울러 경찰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식의 '면죄부'를 주면서도 사전준비나 작전 진행상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는 애매모호한 결과를 내놔 논란을 더욱 불 지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시위대의 불법행위와 폭력 시위가 발단이 됐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운영업체 직원들을 동원한 점이나 과잉

진압 책임까지 묻지 않은 것은 국민적 이해를 얻기 어렵다. 경찰 대신 물대포를 쓴 운영회사 직원들만 기소한 것도 이해가 안 된다. 벌써 법정공방 불거질 설과 편파 시비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형평성이 결여된 사법처리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결과가 논란을 잠재우기보다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물론 불법·폭력시위는 엄벌해야 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시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일은 공권력의 의무이다. 그렇다 해도 인명에는 어떤 경우에도 중시돼야 한다. 이번 사건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채 법원으로 넘어왔다. 용산참사는 우리 사회에 경고와 함께 과제를 안겨 주었다. 이제는 그 경종의 의미를 헤아려 보고 과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댄 채 차분히 풀어나가야 한다.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 논란을 부추긴다면 공멸을 부를 뿐이다.

無等鼓

우리나라 국회에 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때는 20여 년 전인 1988년 8월이었다. 그해 11월에는 사상 최초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5공 비리와 관련된 청문회가 당시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당시 초선이던 노무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명패를 집어던지며 대갈일성해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다. 노 의원은 이를 발판으로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정치적 성과를 얻었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한보 청문회, 아웃리 청문회, 파업도사건 청문회 등이 줄을 이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적적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청문회는 2000년부터 시작했다. 인사 청문회에서는 크게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문제삼는다. 청문회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및 장관 등을 새로 임명할 경우 거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10여 년 동안 운영돼 온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에서는 일정한 '법칙'이 발견된다. 청문회의 우선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함께 재산형성 과정이나 논문 중복게재 후 후보자의 도덕성이 주된 논란거리가 된다는 점이다. 업무에 대한 소신이나 모두 뚜렷했지만, 뚜렷하지 못한 처신이 항상 문제로 꼽혀온 것이다.

공직후보자 가운데 일부는 자녀교육이나 재산증식을 위한 위장 전입 문제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다. 양심을 부끄럽게 하는 논문 중복게재나 탈세, 탈루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이도 있었다.

9일 진행된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정책 소신과 함께 부친 소유 운수회사 구입과 관련한 증세 탈루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다. 본인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불거지는 위장전입과 논문 중복게재에 탈세 탈루 의혹, 업무능력과 함께 처신도 흠잡을 수 없는 신선한 공직 후보자를 만나게 되면 불가능한 것인지 아쉬울 따름이다. /박지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청문회의 '법칙'



기고

김선필



갈수록 치솟기만 하는 고층건물, 지하 심층화, 수없이 많은 위험물질의 증가는 화재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구의 온난화 등 이상기후 현상은 재해발생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다양화 되어가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의용소방대에 자원하여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의 임무를 맡아 봉사한 지 5년이 되었다.

민들이 모두가 1등 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을 주고 있으며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라는 걱정이 된다. 지난달 17일 동구 총장로 3가 모 소광물 화재 시 건물들이 붕괴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자 119대원들이 불구경을 하는 시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접근하여 휴대전화 버튼을 연방 눌러대고 있었으니 이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안전불감증 병에 걸려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119 현장활동 적극 협조해야

우리 의용소방대원은 의용 봉공 정신과 협동심이 강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 안전봉사 단체로서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 화재현장 교통정리 및 소방활동 보조, 산발진화, 구조구급활동 보조, 화재예방 홍보, 대형 수해, 설해 현장복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19 현장활동 지원을 하면서 가까이서 보니 소방공무원의 인원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실감할 수 있으며 위급함을 무릅쓰고 오직 시민안전과 봉사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더욱더 마음 아픈 것은 솔 취한 취객이 구급활동을 하는 대원을 폭행하고 화재, 구조·구급출동을 하는 긴급 자동차를 무시하고 피양의무를 지키지 않는 양해 운전자,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긴급대피 안내를 따르지 않는 많은 시

다행히도 현장 소방대원들의 필사적인 대피요도로 수분 후에 무너진 건물 예로부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19대원들이 목숨을 담보로 화재와 사투하는데도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진화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볼 때 재난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감히 지적하고 싶다.

각종 사고로부터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 모두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 내 가족,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소방차 출동 시 피양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대피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119대원들이 현장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짐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1등 광주 건설에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란다.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운전중 흡연 사고 우려... 규제 시급

선진국 중 프랑스는 예전부터 운전 중 흡연을 하면 처벌을 하고 있다. 호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운전중 흡연에 대해 관대한 나라 중 하나이다.

얼마 전 나는 승용차를 운전중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해 있었는데 바로 앞에 서있던 트럭의 운전자가 담배꽂초의 불꽃을 손가락으로 튕겨 날린 게 내 승용차 보닛에 떨어져 한동안 타올랐던 황당한 사례를 겪었다. 주행 중 흡연으로 인해 이 같은 황당한 사고를 당하거나 저지르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차량 밖으로 버린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하다. 얼마 전 한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운전중 흡연으로 인하여 버린 담배꽂초가 어

디에 떨어지는지 실험한 것을 본 적이 있다. 60%가 뒷좌석 창문으로 도로 날아 들어오거나 화물차의 경우엔 적재함에 떨어졌다. 이는 뒤따라오는 차량의 운전석 창문이나 뒷좌석으로 날아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운전 중 흡연행위에 대해서 인명사고 및 물적 피해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인우·광주시 북구 청풍동

NGO 칼럼

전태갑



지역농업개발은 개발산업으로는 육성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농업의 어떤 작목의 생산을 증대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자면 생산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유통망을 따로 떼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려 하거나 제조나 가공 그리고 교육만을 따로 떼어서 개발하거나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농업 개발 정책이 되지 못한다. 생산, 유통, 제조, 가공, 교육 등이 전반적으로 연관을 갖고 종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

현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생산자들에 대한 교육은 일관성 있게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산자들에게는 생산기술, 품종의 이 지역 토양 적응교육, 병충해 방제 교육 등 결국 이러한 일들은 생산자들의 알맞게 교육 여부에 성패가 크게 달릴 것이다. 유통에 있어서도 생산자만이 등급화를 시킬 수 있고 자기가 재배한 어느 고추가 제일 좋은 제품인가를 가장 잘 안다. 농업연관산업이란 농업에 연관을 갖

지역 농업, 종합개발 필요하다

이다. 물론 총체적으로 농업연관산업과도 연계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특산물로 고추를 선정하고 특허를 시키고 싶으면 세계 각국의 고추를 수입하여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고추를 우선 만들어 주어야 한다. 품종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배된 지역 내의 고추는 특화시키고 등급화시켜 이를 세계적으로 특허, 등급화시켜야 한다.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고추의 품종과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특성에 맞게 가공하고 제조하여 제2차 가공, 제3차 가공을 시행한다. 고추를 그냥 양념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약간 자차가공으로 식품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고추가공으로 고차식품을 만들 수도 있다.

더불어 2, 3차 가공을 통하여 식품로만이 아니라 공업원료, 색소, 음료식품, 기타 수많은 가공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여러 가지 가공과정을 거친 제품은 유통현장에 출

고 발전하는 모든 산업을 말한다. 이는 전방 연관 산업, 농산물 생산업, 후방 연관 산업으로 나뉜다.

전방 연관 산업은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되는 산업을 말한다. 농산물 생산업은 농업을 좁게 말해서 농 작목을 생산하는 농산업을 말한다. 후방 연관 산업은 농업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 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산업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구 농기계, 비료, 농약, 각종 자재 등이 필요하다. 그러한 농사에 필요한 투입물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연관산업에 필요한 제반 산업을 총칭한다. 전체를 알고 종합해서 연관해서 종합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농업개발은 종합산업개발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풀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광주 전남 농업발전을 위한 모임·전남대 명예교수〉

자전거에도 교통법규 적용했으면

요즘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 자전거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지원하던 전동도로도 늘고 자전거 인구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자전거로 출퇴근과 레저 및 산책하는 등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 게 증명된 셈이다.

이처럼 이용자가 늘다 보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증가한다. 사실 도로교통법상에는 자전거도 명확하게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는 게 맞지만 우리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좁은 간선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도 보이는 등의 위험한 광경을 보기도 한다. 며칠 전에도 산책하며 길을 걷

던 한 청년이 거칠게 달리던 청소년의 자전거에 맞쳐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다행히 그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나이 드신 할아버지나 할머니였더라면 어땠을까.

또한 자동차 운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운행하다가 후방대차로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들이받기라도 한다면 민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는 모든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까지 자전거도 자동차이며, 자동차와 똑같은 교통법규를 적용받고 또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봐야 할 것이다. ▲홍명호·광주시 서구 풍암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대표전화 2200-551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72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점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어문제작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